

(논단) 최근 남북 경협 환경 변화와 2008년 전망

홍 순 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요 약

최근 한반도 정세는 북핵 진전과 북미 및 남북 관계 개선 등으로 크게 진전되고 있다. 특히 남북 경협은 2007 남북정상선언과 후속 회담에서의 합의 도출 등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낮은 단계의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로드맵이 마련됨으로써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2008년은 향후 5년간의 한반도 정세 전망에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새정부 출범 초기의 한일 양국과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 그리고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 여부에 따라 향후 북핵 및 남북 관계 향방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핵불능화 및 핵프로그램 신고에 대한 북미간의 입장차는 여전히 북핵 진전의 걸림돌로 남아있으나, 전반적으로는 불능화 이행 단계의 순항과 미·일의 유연한 대북 정책에 대한 기대로 최근의 긍정적 분위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남북 관계는 한반도의 긍정적 환경 조성 영향으로 하반기에는 한반도 평화 체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며, 새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또한 다소의 수정이 있을지언정 대북 포용 정책의 큰 틀은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새정부 초기에는 양측간 기싸움으로 북한이 정치·군사적 면에서 북핵 진전과 남북 관계를 분리 접근함으로써 자칫 통미봉남(通美封南)의 후유증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2008년 남북 경협은 북핵 진전 기대와 2007 남북정상선언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대선 후보들의 대북 정책이 종전의 단순 지원에서 북한 경제 희생 지원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어, 경협 활성화는 새정부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획기적인 진전을 위해선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자원 조달 등이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의 변화된 경협 환경이 실제적인 성과로 발현되고 경협이 한 단계 발전되기 위해서는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이란 중장기 목표 하에 지속발전가능한 경협 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북한을 단순한 리스크 관리 대상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새로운 발전 공간과 신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블루오션이라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중장기 로드맵 하에 보다 일관되고 전향적인 대북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둘째, 북한 경제 희생과 개발 지원을 위해 남한 내부는 물론 국제사회의 협력 유도 방안 모색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정부의 대북 투자 지원 정책은 개별적 사업 추진보다는 통일경제적 관점에서 남북한 산업 협력 및 지역 개발과 연계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들어가는 말

2007년 한반도 정세는 북핵 진전 기대와 남북정상선언 등으로 크게 진전되었다. 한반도의 먹구름으로 작용했던 북핵 문제는 2.13 합의와 핵 시설 폐쇄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전환의 토대가 마련되었고, 북미 및 남북 관계도 크게 개선되었다.

특히, 남북정상선언으로 남북 관계 발전과 민족 공동의 평화 번영을 위한 이정표가 마련되었고, 본격적인 남북 경협 활성화와 낮은 단계의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로드맵이 만들어졌다. 남북총리회담과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비롯한 후속회담 합의로 이행의 실천력도 더욱 높아졌다. 이제 남북 경협은 종전의 단순 교역과 3대 경협 사업 중심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남북 경협의 새로운 방향 모색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남북공동선언 이후의 경협 여건 변화와 전망을 우선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향후의 바람직한 남북 경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의 남북 경협 환경 변화는 정치·외교 등의 비경제적인 측면과 정상선언의 경협 부문 중심의 경제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경협 전망은 북핵 문제와 남북정상선언 및 후속 합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정상선언 이후 경협 환경 변화 점검

경제 외적 측면의 경협 환경 변화

남북 경협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과 남북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경제적 측면보다도 경제 외적 측면에 직간접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핵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이기에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남북 경협을 전망하기에 앞서, 최근의 경제 외적 환경은 북핵 문제를 비롯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환경과 북한의 대내외 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북핵 문제는 2.13 북핵 합의와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대북 송금 문제 해제, 핵시설 폐쇄와 10.3 북핵 합의 등으로 해결의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핵 불능화 기술팀이 영변 원자로의 폐연료봉 인출 작업에 착수(11. 5)함으로써 연내 핵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 등 비핵화 2단계 조치 이행이 순항 중에 있어 북핵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북미 및 북일 관계에 있어서도 북핵 진전과 일본의 신임 내각 등장으로 미·일의

대북 정책이 유연해짐에 따라 호전되고 있다. 미국은 대외 정책에 있어서 중동 문제의 장기화 탈피와 2008년 대선을 겨냥한 북핵 문제 우선 해결에 역점을 둬으로써 대북 정책을 종전의 강경 일변도에서 대화 중심으로 변환하였다. 북일 관계 역시, 후쿠다 신임총리의 유연한 대북 정책 표명으로 북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비공식 실무협회가 추진 중에 있다.

한편,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정책 변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금년 들어 세대 교체와 실적 위주의 인사를 단행하였으며, 대남 정책과 경제·외교·국방 분야의 수장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하였다. 특히 정상회담 이후에는 경제 강성대국 건설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1일 폐막된 전국지식인대회에서는 故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을 '강성대국' 달성의 해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 이는 2012년까지 김정일 체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경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여 사상, 군사, 경제 3개 부문에서 강국을 뜻하는 '강성대국'의 달성을 대내외에 선포하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이는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경제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이라는 경제강국 건설을 핵심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이에 모든 역량을 주입할 뜻을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남북정상회담 직후부터 '국제사회와 연계된 경제 재건' (新자력갱생)을 강조하는 등 대외 관계 강화 움직임이 뚜렷하며, 개방을 통한 경제 발전 의지를 시사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을 방문(10. 16~18)한 농 득 마잉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에게 베트남의 개혁·개방 노선을 벤치마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홍콩의 시사주간지 아주주간(亞洲週刊)이 보도(10. 28)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베트남의 '귀중한 경험'을 거울로 삼기 위해 베트남 측의 답방 초청을 기꺼이 받아들일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영일 내각 총리의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의 4개국 순방(10. 26~11. 7)을 통한 동남아 발전 모델 학습을 비롯하여, 북한 무역상의 쿠바와 칠레 방문 등은 보다 적극적인 대외 개방 및 경제 발전 의지를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김명길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대사는 전미주 외교정책협의회와 뉴욕코리아 소사이어티가 공동 주최한 북미 금융실무회담의 북측 대표단을 위한 환영 만찬(11. 16)에서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는 개혁(reform)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지만 세계와 기술 교류를 통해 세계가 변화하는데 맞춰나가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월 20일에 전했다.²⁾ 실제로 2.13 합의 이후 최근 8 개월 동안에 북한 고위급의 국제 교류 건수는

1) 연합뉴스, "북, 2012년을 '강성대국' 달성 해로 설정", 2007. 12. 2.

2) 연합뉴스, "북, 세계 변화에 맞춰 나가길 원한다", 2007. 11. 20.

약 100여 건으로 이전 8 개월의 60여 건에 비해 크게 늘었으며, 대상 국가도 기존의 아태 지역 중심에서 아프리카, 유럽 등지로 다변화되었다.

경제적 측면의 경험 환경 변화

경제적 측면에서의 가장 중요한 경험 환경 변화 요인은 북핵 진전을 비롯한 경제외적 환경의 긍정적 변화의 시너지 효과와 함께, 2007 남북정상선언과 후속 실무회담의 진행에 따른 경험 환경 개선이다.

남북한 양 정상은 2007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통해 낮은 단계의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민족 공동 번영의 기반 조성은 물론, 경제와 군사·안보의 선순환 구조 형성의 발판을 마련하였다.³⁾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개성공단 2단계 조기 착수를 비롯하여, SOC 확충, 백두산 및 개성관광 등에 합의하였으며, 3통 문제를 비롯하여 경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여건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남북정상선언은 남북 경험이 양적·질적으로 향상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남북 총리회담(11. 14~16)과 남북경제공동위원회(12. 4~6) 등에서 남북정상선언의 구체적인 이행 시기 및 추진 체계를 담은 합의문을 도출함으로써 정상선언의 실천력이 높아졌다.

3) 홍순직, “남북정상선언과 남북경제공동체,” 『통일경제』 가을호, 2007. 10. 18. pp. 20~26.

< 2007 남북정상회담 및 총리회담의 경험 분야 주요 합의 내용 >

구 분	주요 내용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주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개발, 장관급 추진위 구성 - 2007년 중 실무접촉과 현지조사, 2008년 사업 계획 확정 - 공동 어로 구역과 평화 수역 설정 : 12월중 분과위원회 개최 - 민간 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 12월중 조선 및 해운협력 분과위 차회의 부산 를 통해 협의 - 한강 하구 공동 이용 - 12월중 현지조사, 2008년 내 골재 채취 사업 착수
개성공단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사업의 조기 완공과 2008년 내 2단계 사업 착수 - 근로 인력의 적기 총원 보장 및 숙소 건설 협력 출퇴근 문제 개선(통근 열차 이용) - 문산~봉동간 철도 화물 수송 개시(12. 11) - 3통(통행·통신·통관) 등 제도적 조치의 조기 완비 - 통행 : 2007년 내 7~22시까지 출입시간 확대, 절차 간소화 - 통신 : 2007년 내 인터넷, 유무선 전화 서비스 시작 - 통관 : 신속성과 과학성 보장을 위해 물자 하치장 건설 추진
SOC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경 올림픽 남북응원단의 경의선 이용 -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 2007년 중 현지조사, 2008년부터 개보수 추진 -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12월초 실무접촉 실시) - 남포 및 안변의 조선협력단지 건설 - 2008년 중 안변 지역에 선박용 블록공장 건설 착수 - 남포 영남배수리공장의 설비 현대화와 선박블록공장 건설
관광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두산 및 개성 관광 적극 협력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 개발, 농업, 보건 의료, 환경 협력 사업 등 협력 - 2008년 상반기 중 단천 광산 등 지하자원 개발 사업 구체화 - 2007년 중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 저장고 건설 등 -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원료 지원, 전염병 통제 등 - 산림녹화 및 병충해 방제, 환경 오염 방지 협력 - 쌍방이 관심하는 수역에서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등 협력 - 남북경제협력공동추진회의 부총리급 격상과 분과위원회 운영

남북정상선언 이후 재계와 지자체들의 경협 확대를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우선 재계는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남북간 민간경협기구인 '남북경협민간 협의회'를 11월 5일 발족하였다. 이 협의회는 운영위원은 전경련과 무역협회 등 경제4단체 회장을 비롯하여, 지방상의 회장 12명과 주요 민간 및 공기업 대표 등 총 7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계는 국내 30대 주요 기업대표 등으로 실무 대표급을 구성하여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연내 조선상업회의소와 업무 협력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또한 북한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관련하여, 정부 측과 조선 관련 업체로 구성된 실사단이 11월 3~7일에 방북하였으며, 12월중에는 2차 현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실사단은 산업자원부와 통일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와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 업체와 기자재 업체, 한국전력 등 관련 기관 관계자 25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변에 선박 블록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대우조선해양은 남포는 수리조선소로서, 안변은 조선용 블록(철관 구조물) 공장으로서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특히, 현대그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2005년 7월 이후 약 2년만의 재회를 통해 3대 관광사업과 7대 사업 등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대북 사업의 독점적 사업권을 재확인하고 정상선언의 실제적인 이행 단계에 들어갔다. 관광 사업의 경우, 50년간 배타적 사업권을 가지면서 서울~백두산 직항로를 이용한 백두산 관광을 내년 5월부터, 개성관광은 금년 12월초부터, 금강산 비로봉 관광은 내년 4월부터 실시하기로 합의(11. 3)하였다. 이의 이행을 위해 현대아산은 12월 5일부터 개성 관광을 박연폭포와 영통사, 왕릉의 3개 코스로 구분하여 월요일을 제외한 주 6일(하루 300명)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SOC 사업에 대한 현대의 참여 검토를 언급하였으며, 류경정주영체육관을 활용한 문화 교류 사업과 개성의 양묘장 건설 사업 등에도 논의하였다.

한편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는데, 특히 경기도는 개성공단 협력 단지 조성 등 6개의 정상회담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사업으로는 ① 경기 북부 지역 신중합발전구상 수립 ② 한강 하구 공동 개발 ③ 개성공단 협력단지 조성 ④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 ⑤ 경제특구(해주 등) 건설 참여를 통한 남북 경협 본격 추진 ⑥ 남북간 교통 인프라 연결 및 통합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NGO 단체들의 대북 사업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현대자동차 노조와 우리겨레하나돕기운동본부의 평양시 모란봉의 옥수수 국수 공장 준공(11. 2)을 비롯하여, 남북 시범 농장 및 양묘장 조성과 양돈 협력 사업 등 각 부문별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 기업별 대북 사업 계획 >

기업	내 용
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대북 사업(연간 2만대 규모 브라운관 임가공 사업) 확대 - 신규 투자 검토(가전 등의 분야에서 신규 공장 설립 검토)
SK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에 정보기술(IT) 합작법인을 설립한 후 남북 공동 사업 추진
포스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에서 무연탄 도입 확대 및 마그네사이트 신규 도입 검토
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산~봉동간 철도 화물 운송 등과 연계한 전력 공급 검토 - 개성공단 2단계 조성, 해주특구와 남포·안변의 조선협력단지 조성시 새로운 전력 수요 발생 기대
코오롱, 효성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섬유산업협의체’를 구성, 대북 섬유 분야 원자재 지원 품목 및 지원 규모를 확대할 예정
대우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변 조선소 설립 위해 조선업계 실무자 방북(11. 3)
남광토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호건설 등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착공(10. 19)
현대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초 개성관광 시작, 내년 4월에 금강산 비로봉 관광 개시 - 내년 5월 백두산 관광 시작
마니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 외곽 지역에 육계 시범사육 농장 설립 합의, 내년 초 사육 시작
대한상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경협민간협의회 11월 5일 창립 - 경제사절단 파견, 북측 조선상업회의소와 협력체제 구축 계획
안동대마 방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 남북 합영 물류회사 설립에 합의(12월초) - 연 3억 달러 규모의 북한 내륙 물류 전담 기업으로 발전

최근 남북 경협 동향과 2008년 전망

최근 남북 경협 동향과 특징

2007년 정부는 2.13 북핵 합의 이후 남북 관계 복원과 함께, 남북 경협 활성화의 여건 조성에 역점을 두어왔다. 이로 인해 2007년 10월말 현재 남북 경협은 개성공단 및 경공업 협력사업 등에 따른 상업적 거래의 증가(45.1%)로 2002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개성공단의 경우, 1단계 부지 공사의 마무리로 시범단지 15개 업체와 1차 본단지 24개 기업,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 등 총 52개 기업(공장 기준으로는 26개)이 가동됨에 따라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2006년 1~10월) 166.1% 증가하였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던 10월의 생산액은 2,091만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개성공단 사상 최초로 월간 생산액이 2,000만 달러를 상회하였으며, 가동 업체의 평균 생산액도 40만 2,000 달러를 넘어섰다.

< 거래 유형별 남북 경협 추이 >

(단위 : 100만 달러)

	상업적 거래				비상업적 거래	합 계
	일반교역	위탁교역	경제협력	소계 (비중)		
1995	230.4	45.9	0.0	276.3 (96.2%)	11.0	287.3
2000	110.5	129.2	33.6	273.3 (64.3%)	151.8	425.1
2002	171.8	171.2	25.0	367.9 (57.3%)	273.8	641.7
2004	171.8	176.0	89.2	436.5 (62.6%)	260.5	697.0
2005	209.8	209.7	270.0	689.5 (65.3%)	366.2	1,055.8
2006	304.1	253.0	371.0	928.1 (68.8%)	421.7	1,349.7
'07.1~10	371.2	260.4	474.3	1,105.9(76.8%)	333.7	1,439.6
('06.1~10)	(248.6)	(212.9)	(300.6)	762.0 (65.2%)	(407.3)	(1,169.3)

자료 : 한국무역협회, 『남북 교역 통계』, 각호

- 주 : 1) 상업적 거래의 경제협력은 개성공단사업, 금강산관광사업, 기타 경협사업을 의미하고, 비상업적 거래는 정부·민간 지원과 사회·문화 협력사업, 경수로 사업 등을 포함
 2) 단, 2007. 1~10월 경제협력 분야에는 2007. 7월부터 집계된 경공업 협력사업을 포함
 3) 소계의 () 안은 전체 남북 경협에서 차지하는 상업적 거래의 비중임

또한 개성공단 관련 교역액은 3억 4,468만 달러로 총 교역액의 23.9%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출은 입주 기업의 제품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와 공단 개발을 위한 건설 장비 및 기계류 반출의 증가로 전년 동기비 54.3% 늘어났다. 한편 동 기간의 공단 입주업체

의 수출 실적은 전년 동기비 112.2% 증가한 3,160만 달러에 달했으며, 수출을 시작한 2005년 4월 이후의 누적 기준으로는 5,230만 달러에 달해 총생산의 22.3%를 차지하였다. 금강산 관광사업도 내금강 관광 및 골프장 개장 등으로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2007년 10월말 현재 금강산 관광객은 약 28만 명을 초과하여 2006년의 23만 8,500 명은 물론, 최고치를 기록한 2005년의 동기간에 비해서도 23.7% 늘어난 수치를 기록함으로써 2007년 전체로는 약 35만 명 내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비상업적 거래는 대북 수해 복구 지원과 북핵 사태로 지연된 중유 제공과 같은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 증가(전년 동기비 574.1%)에도 불구하고, 민간 지원과 사회문화 협력사업의 감소로 전년 동기비 18.0% 감소한 3억 3,370 달러를 기록하였다. 다만, 지원성의 비상업적 거래가 낮아지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과 특정 품목에 편중된 교역 구조, 남북 경협이 경제 외적 불안 요인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점 등은 아직까지 경협의 안정성과 제도화가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8년 남북 경협 전망

2008년 남북 경협은 북핵 진전 및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의 여부와 진행 속도에 좌우될 것이다. 따라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 전망과 남북정상선언 이후의 경협 환경을 토대로 2008년 남북 경협을 전망해보기로 한다.

우선 한반도 정세를 조망해보면, 2008년은 향후 5년간의 한반도 정세 전망에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새정부 출범 초기의 한일 양국과 미 대선에 따르는 주변국들의 대북 정책 변화, 그리고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 여부에 의해 향후 북핵 및 남북 관계 향방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북핵 진전과 부시 행정부 및 후쿠다 내각의 유연한 대북 정책 추진으로 북미 및 북일 관계에도 일정한 진전이 기대된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2단계 이행 조치가 완료되면, 이에 맞추어 미·일의 대북 관계 정상화 협의, 정치·경제적 지원 및 에너지 보상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예상된다. 이에 병행하여 미국도 대북 테러지원국 및 적성국 교역법에 대한 부분적 해제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이고, 2008년 하반기에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북핵 해결의 마지막 단계인 핵 폐기의 초기 단계에 진입할 전망이다. 다만, 핵 불능화 수준 및 상응조치는 물론, 핵프로그램 신고 등에 대한 북미간의 입장차와 6자회담 회원국들 간의 입장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북한과 시리아의 핵물질 거래 의혹과 인권 문제 등도 북핵 해결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한편, 2008년 남북 관계는 2007년의 북핵 진전과 남북 관계 회복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 존재하며, 새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또한 다소의 수정

이 있을지언정 대북 포용 정책의 큰 틀이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새정부 출범 초기에는 양자간의 氣 싸움으로 북한이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북핵 진전과 남북 관계를 분리 접근함으로써 자칫 통미봉남(通美封南)의 후유증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남북 관계는 새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에 대한 연속성 유지 및 남북정상선언의 합의 이행 노력 여하에 따라 '지속 발전'과 '소강 국면'의 분기점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2008년 남북 경협은 북핵 진전과 남북정상선언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확대되고 활성화될 전망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북핵 진전과 군사적 보장 문제 해소 등으로 경제 외적 불안 요인이 완화되고, 3통 문제를 비롯한 법·제도적 문제와 경협 인프라가 개선되어 본격적인 투자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남북정상선언에서 남북한은 개성공단 1단지 본공단의 본격 가동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개발, 관광 영역 등에 합의하였고, 이러한 분위기 편승하여 재계와 지자체들의 대북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 투자 지역과 업종, 규모 면에서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선 후보들의 대북 정책이 종전의 단순 지원에서 북한 경제 회생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어, 새정부에서도 경협 활성화는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경협 진전이 기대된다. 다만, 획기적인 진전을 위해서는 미국의 전면적인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경협 합의 이행 및 보다 대규모 투자 사업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등이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 2008년 남북 경협 환경 전망 >

기회 요인	위협·장애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공단 개발 사업의 본격화 및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본공단의 본격 가동, 2단지 착공 - 경협 인프라와 법·제도적 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 통신, 도로·철도 연결 등 - 관광 사업 확대 (금강산, 개성, 백두산) - 북핵 진전으로 전향적 대북 정책 기대 - 지자체, NGO들의 인도적 사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외적 불안 요인의 상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미간 불능화 수준 차 존재 · 새정부와의 氣 싸움 가능성 우려 - 남북 경협의 제도화 미흡 -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 본격 투자를 위한 자원 조달 문제

남북 경협 추진의 새로운 방향과 전략

신경협 사업의 기본 방향

북핵 진전과 남북정상선언으로 남북 경협은 종전과 다른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제 이러한 변화된 환경이 남북 경협을 보다 활성화하고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도록 국민적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남북 경협의 목표와 기본 방향을 남북 공동의 번영과 상생의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이란 중장기적 측면에 두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북핵 문제를 비롯한 경제 외적 불안 요인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하에 정부는 지속 발전 가능한 경협 체계와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뒀다. 이를 통해 경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성공적인 경협 모델을 정착함으로써, 남북 경협이 어느 한 쪽의 일방적 지원이나 이익이 아니라 남북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의 경협 사업이란 인식의 전환과 함께, 상호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통일경제적 시각으로 북한 경제 회생 지원과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 완화를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지향하며, 나아가 동북아 경제 허브 기반 조성을 추구해야 한다

신경협 추진 5대 전략

우선 중장기 로드맵 하에 민족공조와 국제공조 조화 속에, 일관되고 전향적인 대북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북한을 단순한 리스크 관리 대상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새로운 발전 공간과 신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블루 오션으로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의 정상선언 합의 내용이 차기 정부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대북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함으로써 남북 상호간의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비핵화 2단계의 조속한 이행을 유도하는 한편, 북핵 해결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중재자 및 창의적 역할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 하에 중국·일본 등 주변국과도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6자회담을 한반도 및 동북아의 다자 안보협력체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남한 내부는 물론, 국제사회의 협력 유도 방안 모색에 역점을 뒀다. 북한 경제 회생과 개발 지원을 위해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국제 환경 조성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외교적 역량 확충과 국제적 공감대 확산 노력과 함께, 국제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동반 진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국제 컨소시엄 구성은 재

원의 안정적 확보는 물론, 대북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북측의 일방적인 합의 불이행 예방과 사업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북핵 해결이 가시화되어 국제사회 차원의 대북 개발 자금 유입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 투자 개념의 사전 투자가 필요하다.

셋째, 통일경제적 관점에서 정부의 대북 투자·지원 정책은 남북한 산업 협력 및 지역 개발 차원의 연계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개별적 사업 추진보다는 대북 사업의 효율성과 여타 경험 사업과의 연계성 및 중장기 로드맵 등을 고려하여 투자의 우선 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대북 SOC 지원 사업과 대규모 개발 사업은 중장기 로드맵 하에 남한의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한반도의 국토 균형 발전, 나아가 동북아 허브로의 발전 구상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예컨대 서해안 산업벨트 육성 원칙하에, 개성공단을 성공적인 경험 모델로 우선 정착시키고 해주공단을 점진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해주 특구를 단기적으로는 농수산물 가공산업 및 유통센터 형태로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임해산업단지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한편, 체제 전환국 및 경제 개발 성공 사례에 대한 공동 연구와 북한 경제 회생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작성을 공동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회성 단순 지원보다는 북한 경제 회생과 성장 잠재력 확충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경제난 완화와 산업화 역량 및 자본 확충을 위해 농업기반 확충과 경공업 육성, 부존자원(지하자원, 관광) 활용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개성공단을 성공적인 특구 모델로 정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경제가 지속 발전 가능한 산업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중화학 공업의 선택적 현대화와 첨단산업 분야의 병행 진출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신규 특구 형태보다는 지역별 특성과 산업 인프라 여건을 고려한 '특성화 산업 단지'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경의선 중심의 물류망과 전력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국제기구와 연계한 인적 인프라(교육 프로그램) 지원도 필요하다.

끝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경험 재원 확충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대북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대북 지원의 합목적성 확보를 통해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과 국민 설득을 유도하여 '남남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북 정책 홍보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대북 지원 및 경험 확대에 대한 명분과 국민적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재원 조달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남북협력기금의 확충과 다양한 경험 기금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500조 원에 달하는 시중 부동산자금의 생산자금화 및 통일기금화를 위해, 약 4~5%(200억 달러) 내외에 한해 장기 저리의 무기명 채권 발행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적극 검토할 만하다. ♠